

북한의 핵테러와 대응방안

김성우*

요 약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으로 대응방향은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은 적의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공방어는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방향을 토의 연구하는 한편 인구밀집 도시와 국가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쟁점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인지 와 이것을 기초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의 하나인 킬체인(Kill Chain)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으로만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억제 대책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The Countermeasur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Terror

Kim, Sung Woo*

ABSTRACT

South Korea should correspond to the primary threat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is necessary to have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realistic problem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e can intensify military pa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the current military power. Currently, we take note the threat North Korea's missile. We can not control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and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North Korea have successfully miniaturized nuclear enough to carry by the missile. We should overview and check the Korea's missile defenses system. While the direction of the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deployment with a focus on lower and upper air defense network. And discuss defense research should be to build a system that can be protected with a key strategic facilities and cities.

While North Korea have nuclear weapon, the main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 six party talks countries try to solve the problem by the international and diplomatic approach. At the same time we should make somewhat to defend measures such as military defenses of Kill chain system to protect our country. Kill Chain is on of the effective defense system. We know that North Korea do not abandon to develop nuclear weapons by diplomatic efforts. We should performed in fact by a variety of military suppression method.

Key words : Countermeasures, preemptive strike, nuclear weapon, defenses system, Kill Chain

접수일(2014년 8월25일) 수정(1차:2014년 10월22일)
게제확정일(2014년 10월28일)

*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1. 서론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은 상존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한반도가 핵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으며 핵을 이용한 테러의 충분한 능력과 여건과 동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정국이 불안할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북한내 우발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도발과 테러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사실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핵 테러 차단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달성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핵 테러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서울에 핵폭발이 발생 했을 때를 가정한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핵 위협이 얼마나 막대한 파괴와 손실을 초래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핵 테러가 초래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전 차단의 조치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과 군사적인 대응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 테러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 한반도 핵사용 시나리오[1]

북한이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경우, 북한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핵폭탄의 위력은 TNT 15킬로톤 이하의 위력을 지닐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예상되는 4~5개의 핵폭탄 가운데, 단 1개만이 한·미연합군의 대공방어망을 뚫고 폭격에 성공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들어서 있는 용산의 삼각지를 지목

했다. 이는 북한이 핵 사용 직후 전면전 개시를 염두에 둔다면 가장 개연성이 높은 설정이다.

삼각지의 상공 500m에서 15킬로톤 핵폭탄 1기가 폭발, 낙진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 직접 피격대상인 국방부와 합참, 용산 미군기지와 전쟁기념관 등은 ‘녹아서 증발’되며, 후암동에서 이천동에 이르는 용산구 일대는 즉시 초도화된다. 서울역, 서울시청을 비롯해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의 건물은 대부분 반파되고, 고층빌딩의 경우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중앙청사와 외교통상부, 청와대도 피해범위 안에 놓인다. 서쪽으로는 마포와 서교동, 여의도 일부가 포함되며 63빌딩은 무너져 내린다. 남쪽으로는 상도동 및 동작동 일대, 동쪽으로는 반포와 압구정, 청담동 일대가 피해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 같은 직접피해를 통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민이 40만명, 이후 추가로 사망하는 시민이 22만명이 넘으리라는 것이 NRDC가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삼각지 상공 100m에서 폭발이 일어나 비교적 낙진이 적은 경우 84만명, 지면에서 폭발이 일어나 낙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12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람 30만명, 외상으로 인해 끝내 사망하는 사람 10만명, 낙진에 의한 단기 사망 55만명, 낙진에 의한 장기 사망자가 35만명 가량 될 것으로 NRDC는 분석하고 있다.

3. 북한 핵 테러 해소 및 대응방안

3.1 북한의 비핵화

윌킨슨은 테러의 대응방법을 논의하면서 “예방이 치료보다 더 낫다”(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라고 언급한 바 있다.[2] 이는 곧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완전한 사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하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테러를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의 근절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테러리즘 발생 환경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 테러리즘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나 불법

세력이 핵 물질에 접근한다면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 할 것이며, 핵 테러는 특히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3] 북한이 핵 테러를 계획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을 한다할지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면 외교적·경제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핵 테러는 곧 북한체제의 파멸이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북한 수뇌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현재 개발 중인 핵무기를 평화적인 사용으로 그 개발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에 대한 통제 강화는 물론 여러 가지 통제방책을 동원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유엔제재결의안 이행을 촉구해야한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강행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10월 14일에 1718호를 채택하였고,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 9·19 공동선언 이행, NPT 복귀,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 준수를 촉구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 실험으로 인해 유엔은 무기 금수, 금융 제재, 선박 검색, 7인 이내의 제재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다. 또한 2009년 9월 25일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1887호를 채택하고 핵 위협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유엔의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지지를 일관성 있게 표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6자회담 복귀, 정상회담 개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유엔국의 유엔제재결의안 이행이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도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핵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둘째, 남북한 반테러 공동선언문 채택 및 국제협약

가입 유도이다. 공동선언 및 국제협약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포기한다는 약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반대하는 국제적 정치 분위기와 일치되는 것이다. 현재 반테러 관련 국제협약은 12개가 있으며, 한국은 12개 협약에 모두 정식으로 가입하고 국내 비준도 했다. 북한은 9·11테러를 계기로 2001년에 2개의 테러관련 협약에 가입하는 등 총 7개의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아직도 5개 국제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기에 북한의 가입을 유도하여 국제적인 테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북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도 현재까지의 모든 핵 개발 과정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그랜드 바겐을 적극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 제안을 외면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동등한 외교 원칙을 적용, 핵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한 외교정책 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랜드 바겐의 외교적 함의를 고려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남·북간 긴밀한 협의와 교류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도 할 수 있다. 남측의 갈등 지향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 및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법의 필요성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고,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함의를 토대로 5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심부분 폐기에 부응하여 5자가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서로 요구사항을 한 마음으로 주고받자는 것이다.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기본 전략과 접근방식이 상이하여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나 입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의 해결방안을 기본으로

5자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하고자 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북핵 폐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5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하면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핵 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감한 핵 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관련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부실한 핵 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4)과 같은 기존의 임시적 협력 체계를 지속 가능한 국제기구로 전환되고, 이에 더하여 핵 물질과 기술을 보다 투명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기존 국제 규정의 강화와 구속력 있는 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핵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과 핵물질·원자력의 안정된 관리가 국제적인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지금, 국제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핵물질 관리 및 통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불투명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비확산체제를 강화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9·11테러 이후 비확산체제 강화가 이루어짐과 함께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 역시 계약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위축되지 않고 핵 확산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핵비확산체제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5]

다섯째, 북한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대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통해 정치적 제재와 경제적 재제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및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최근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저버 자격을 신청한 것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하여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식량문제, 인권 문제 등과 병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테러동기 감소 차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화해의 대상인 동시에 주된 위협으로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민족간 화해협력과 안보 달성이라는 다른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6]

이에 더하여 2012년 3월 국제 정상들이 한곳에 모여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7개국의 정상과 4개의 국제기관(유엔,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인터폴)의 수장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년의 시점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는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의 추종자였으나, 이제부터 핵 안보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선두에서 이끌어내려는 창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국제적인 안보문제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이 평화적 원자력산업 강국으로 서의 브랜드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회의가 갖는 상징성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큰 계기로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7]

3.2 테러자금 감시

북한이 핵무기개발자금 및 테러자금 거래 방지를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8]에 사상 처음 가입했다. 금융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교육정책으로 해석돼 미국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4년 7월 17일 정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 The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9]는 전날 마카오에서 정례 총회를 열고 북한의 옵저버 자격 회원 가입신청을 승인했다. APG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아태지역 기구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1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개국과 FATF, 유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 27개 국제기구가 옵서

바로 등록되어 있었다. 자금세탁방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은 북한의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0]

APG는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금융기구(FATF)의 아태 지역기구로, 핵무기 개발 자금과 테러자금 거래 방지 등을 목표로 97년 설립되었다. APG 옵서버 회원은 정회원이 지켜야 하는 6개 의무 사항 가운데 3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의 필요성 인정, 이와 관련한 입법과 조치의 개발 등이다. 북한은 회원 신청을 하면서 이와 같은 국제기준을 이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APG 옵서버 가입을 통해 국제 규범에 편입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2013년 4월에도 APG 가입을 신청했지만 관련 규약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다. 그랬던 북한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자신들이 테러자금 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더욱 촘촘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북한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APG에 진진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들이 제재나 자격박탈까지 할 수 있어 북한의 진정성은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간주했고 북한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에서 돈세탁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지목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구는 이달 중순 파리에 총회를 열어 북한과 이란을 국제사회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 국가로 지목하면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구는 성명을 통해서 36개 회원국에게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의보를 자국의 금융기관에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 기구는 2012년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Targeted Financial Sanction)'를 도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됐다고 지목한 기업들과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자금 지원 금지를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및 관련 자금 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는 이를 수용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호자금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2013년 북한의 외국환 거래은행이자 통치자금조성용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조선 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북한은 2005년에도 미국이 대외자금세탁 창구로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내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바람에 심각한 외화 부족사태를 겪었다.

국제사회의 권고에 반응이 없던 북한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자신들이 테러자금 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더욱 촘촘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APG에 진진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들이 제재나 자격박탈까지 할 수 있어 북한의 진정성은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개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가 있다.

3.3 테러행위 사전탐지 및 대응

정책결정자가 전쟁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기 전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보통 정책결정자들은 상대방이 겪어야 할 비용보다는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정이라면 상대방이 겪는 피해 내지는 비용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에 핵폭탄 투하를 결정하였던 트루먼도 깊은 고뇌와 갈등에 시달렸다는 기록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11]

핵 테러의 특성상 사전 탐지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반테러리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차각적인 조치로서의 핵 테러 대응조치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테러리즘을 행동화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을 탐지해 공격으로 연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¹¹²⁾ 우리 군의 대북 핵·탄도미사일 제압 체계,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의 1·2단계는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1분 내에 북 위협을 탐지하고 1분 내에 식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숲 속이나 건물 안에 숨겨 놓았다가 발사 후 재빨리 숨는 식으로 감시를 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킬 체인'은 첫 단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위협과 압박은 심각해진다. 북한이 최근 들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킬 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제방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

첫째, 국제 대테러 전문기구의 창설을 주도해야 한다. 테러의 근절은 특정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핵 테러는 그 자체로 국제적, 초국가적 성격을 갖고,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 안보에도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엔 산하에 국제 대테러 전문기구를 만들고,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테러리즘의 동향을 공유하며, 각국의 특수군을 중심으로 대테러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엔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명확한 대테러 전략 및 정책,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부차원의 대테러 기구 편성 및 기능별 임무 부여를 통한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한 국가의 선언적 정책은 예하 대테러 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국가의 테러방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북한 및 테러리스트들에게 확고한 거부 의지 및 대응 자세를 천명함으로써 테러리즘을 억

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전적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선언적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에 의거하여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조차 부족한 법률도, 법규명령도 아닌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 대테러활동 및 테러 대응 체계가 운영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실무기구를 만들거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 테러리즘을 비롯한 국제 테러리즘에 대해 명확한 외교 및 군사,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심의,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 각 부처간 '대테러 업무'를 조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효과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테러대응체계를 국가 위기관리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의 위기관리시스템은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대통령 훈령 229호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지침을 근거로 테러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하여 대테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각 부처별로 부여된 임무마저도 평상시 업무와 중복 수행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위기관리시스템의 조직편성이 '위원회' 형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사태 발생시 새로이 조직을 편성 및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시 및 기존 자치단체까지 그 역할과 임무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테러리즘 공격 사전 탐지 및 예방, 복구활동 등을 총괄·조정하는 '국토안보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 통합 조정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미국은 테러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부처별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이 갖추고 있는 테러 대응체계의 형식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상설 대테러 통합 조정기구를 운

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경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대테러 작전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는 대공업무와 해외 정보수집 역할을 주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이를 군과 경찰이 지원하는 형태이다. 북한의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공요원은 주로 인질납치에 대응하는 부대로서 별도의 지휘체계에서 상호 모호한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13] 현재 경찰특공대는 형식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상급 지휘관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청, 경호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한 직·간접 지휘통제로 업무의 이중성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대는 경찰특공대 이외에도 특전사 707부대와 해군 특공대가 구성되어 있으나, 각부대의 임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중복 및 경쟁하게 되어 대테러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14] 따라서 대테러 업무관련 기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 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한국 내 원전시설 및 핵 시설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핵 테러리즘의 유형 중 가장 기술적 제약이 약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한국 내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행위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는 대테러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테러 발생시에도 자칫 사고와 외부로부터의 테러를 구분이 불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원전시설 및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방사능 유출에 의한 오염부터 핵폭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계대책 공격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재 한국내 원전시설은 민·관·군에 의한 통합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테러행동 발생이후의 조치로써 이루어지는 성격이 강하다.^[15] 비단 항공기 및 원거리 타격에 의한 테러만이 아니라 이원예 의한 테러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경비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첨단 기술을 적용한 대공감시 및 정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테러리즘이나 사보타주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경계태세를 평가하고, 특히 출입자에 대한 통제, 위협 탐지 및 대응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대테러 대비상태를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핵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전 국민들에게 핵 테러리즘 징후 포착시는 물론이고, 테러 발생시에 조속한 안정과 질서회복을 위한 시민의식이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홍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북한이 자행해온 만행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저질러온 만행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분열되고, 북한의 테러리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는 경향들 역시 만연하고 있다. 북한의 핵 테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반도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우리 한국은 정부 차원의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민 전체가 북한의 핵 테러를 비롯한 군사도발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4 북한 내부상황 인지 및 대응

북한은 어려운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초반과 중반의 유화공세와 더불어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이후, 북한 행태의 공격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공격수단으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다.^[16]

최근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는데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다는 것을 내·외신을 통하여 나오고 있다. 유엔안전부장이사회는 비공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유엔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이용,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노동미사일과 스커드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17]

김정일 사후, 감정은 체제의 공고화 필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핵 테러리즘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 테러리즘 가능성을 리더의 역할, 기회, 기술적 요소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북한의 의도와 동기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내부의 정치 및 외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리더의 역할 측면에서 북한은 최고지도자 당은 물론 군의 핵심 권력까지도 북한의 지도자 개인이 장악하고, 직접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 북한 내에서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당과 군의 핵심인사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인을 위한 테러리즘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김정일 사후, 김정인이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또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무분별한 도박 및 테러리즘을 선택할 여지는 충분하다.

둘째, 기회의 측면에서는 북한이 최근 김정은 체제 하에서 국내문제의 불안과 탈북자 증가 등으로 체제 위기감이 만연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 대북 전단 살포, 통일론 부상 등으로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함에 따라 극단적인 군사도발 및 테러리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탈냉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이 권력세습의 완성과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함에 따라 정치·외교·경제·군사·안보 등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추구할 것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한 국가기광과 최근 유엔에서 김정은을 대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려는 시도가 있자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수개월 만에 핵실험을 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 등 능력을 과

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일련의 성과가 아직 미흡함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 테러리즘 가능성이 점증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 요소는 북한이 2005년 2월, 핵무기 소유를 선언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10년 공개한 원심분리기 2,000기 규모의 농축 공장은 북한이 실험실 수준을 훨씬 넘어 농축우라늄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갖추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핵 테러리즘에 필요한 핵물질은 고농축 우라늄 50kg 정도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애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비국가행위자가 아닌 국가의 지위에서 핵 개발을 단행함으로써 공공연히 핵물질을 보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상태이며, 북한이 핵 기술 부족 및 핵 물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핵폭탄을 이용한 핵 테러리즘을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폭탄 및 원자로 및 핵 시설 공격에 의한 핵 테러리즘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궁극적 국가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고에서 분석한 리더의 역할, 기회,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테러리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위협의 유무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 테러리즘의 근본적 차단과 즉각적인 조치로서 대테러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치 한국이 테러리즘으로부터 특히 핵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단일감에 젖어 있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핵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북한의 군사도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을 포함한 테러리즘에 대한 본질 이해 및 국민의 강력한 안보의식이 절실하며, 테러에 대비한 기구 구성, 대테러 훈련과 무기화될 수 있는 핵 물질을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예방책도 강화하는 등 현대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내 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노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핵 테러리즘 분야는 실험을 위한 허용범위도 없고 그 효과가 분명한 안전보호정책도 없기 때문에 핵 테러리즘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혹은 전면 차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18]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핵 군축·비확산 및 핵 안보분야를 다룬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렸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정상회의의 이행 목표인 ‘4년 내 모든 취약 핵 물질의 안보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핵 테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조치들을 논의함에 따라 핵안보 정상회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는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4. 결 론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쟁점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의 하나인 킬체인(Kill Chain)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으로만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억제 대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한국이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2012년 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그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및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가 당면한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

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국방 고위관리자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1] 강정민, “미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신동아』, 통권 543호(2004년 12월호), pp.83-96
- [2] Paul Wilkinson,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London: Macmillan, 1987), p.119.
- [3] 한용섭, “핵안보정상회의 의의와 전망,” 『안보현안 분석』, Vol. 68(2011), pp.1-2.
- [4]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5] 문주현, “국제사회, 핵테러 대비 비확산 공조 활발,” 『통일한국』, No. 304(2009), p.29.
- [6] 강창국,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전개와 대응책,” 『군사논단』, 통권 제 60호(2009) p.66.
- [7] 한용섭(2011), 위의 책, p.4.
- [8]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 1989년 G7 정상회의의 결과로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 [9] The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 ; 지역의 자발적이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1997년 태국 방콕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41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10] 중앙일보(2014), 7월 18일 1면기사
- [11] Wilson D. Miscamble, *The Most Controversial Decision*(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20-39.
- [12] 연합뉴스(2014), 6월 29일자
- [13] 조성권, “21세기 국가 반테러 및 대테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2002), p.246.
- [14]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p.177.
- [15] 이태윤, “국제 핵테러리즘의 전쟁론적 고찰: 핵테

리의 발생가능성·원인·대책을 중심으로,” 국방
안보학술회의(2008), pp.83-85.

[16]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p.24.

[17] 중앙일보(2014), 7월 18일자

[18] 김응수, “테러와의 전쟁: 군사적 대응과 특수부대
운용,” 『군사학 연구』, 제4호(2010), p.68.

[저 자 소 개]



김 성 우(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현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tiger@tu.ac.kr